



미세먼지의 습격... 허뿌연 제주도 27일 제주 시내 전체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을 보인 가운데, 제주도 도두봉에서 노형동 일대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상민기자

“4·3희생자 보상, 과거사 완결 한 걸음”

행안부, 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
 “내년도 보상 실시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 지원”

정부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화하고, 국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면서 73년만에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 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면
 행안부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21년 6월 24일 시행) 전부개정 취지에 따라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4·3사건법’을 중심으로)를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수행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4·3희생자 보상의 밑그림을 완성, 이날 구체적 보상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제주4·3희생자 보상실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첫 입법적 보상으로 과거사 정리의 큰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가 마련한 ‘4·3희생자 피해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월 전면 개정된 4·3특별법 제16조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

료 등 특별한 지원’의 성격은 ‘보상’으로 새로 정의했다.

차등지급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던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은 1954년 평균임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1인당 일실이익 평균값을 추계, 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9000만원 수준으로 균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보상 청구권자는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특례를 줬다.

보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생존희생자·희생자 결정일 등을 고려해 신청순서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5년간 단계적 지급 계획에 따라 2022년 정부 예산안에 1810억

원을 반영했다. 1인당 보상금 액수를 고려하면 1만여명이 넘는 희생자 가운데 내년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희생자는 200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희생자 전원에 대한 일괄 지급이 아닌 순차 지급 방안이 수립되면서 지급순서를 둘러싼 진통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내년도 보상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구체적 보상기준이 담긴 4·3특별법 추가 개정을 의원 발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28일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오 의원 측은 내달 5일 제주에서 토론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서울=부민기자 bu8385@ihalla.com

내달부터 ‘일상회복 추진단’ 가동 도,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 맞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체계 전환에 맞춰 11월 1일부터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과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일상회복 추진단은 제주형 단계적 일상회복 과제를 발굴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집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 기구이다.

경제민생·문화관광·사회안전·방역 의료 등 4개 분야로 구성되며,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이 단장을,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부단장을 맡는다.

경제민생분야에서는 일자리경제 통상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고용시장 활성화 ▷물가상향 모니터링 ▷손실보상 지원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문화관광분야에서는 문화체육체육외협력국이 중심이 돼 ▷문화예술관광사업체·문화예술인 지원방안 ▷제주 관광시장 침체 요인 분석 및 대책 등 문화·관광시장 회복 정책을 발굴하고, 사회안전분야에서는 특별자치행정국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조직과 연계한 도민소통창구 운영 ▷도교육청과 연계한 교육회복 방안 논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정책에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방역의료분야에선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을 중심으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고, 역학조사·재택치료·자가격리 등 새로운 제주형 방역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도는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도 운영해 경제민생·문화관광·사회안전·방역의료 등 4개 분야별로 일상회복 연락처를 위한 과제를 발굴·자문한다. 이상민기자

제주도 금고 1순위 농협·2순위 제주은행

지정대상 금융기관 선정·발표

제주도 예산 중 4조 9000억원대에 이르는 일반회계는 농협은행이, 1조 5000억원대의 특별회계와 기금은 제주은행이 보관·관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오리엔탈호텔 사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도금고 지정대상 금융기관으로 농협은행(일반회계)과 제주은행(특별회계·기금)을 각각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도 금고 약정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도금고 업무를 수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30일 ‘금고 지정 신청’을 공고했다.

금고 경쟁은 농협은행과 제주은행의 2파전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심의에서 1순위 평가를 받은 농협은행이 일반회계 금고로, 2순위 평가를 받은 제주은행이 특별회계·기금 금고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고지정과 관련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분예산 기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9047억원, 특별회계와 기금은 각각 9252억원과 6693억원이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 중 농협·제주은행과 ‘도금고 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금고 약정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농산물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 강화

비대면 판로 개척 등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농산물의 비대면 소비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

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소비 유통방식이 대면 거래에서 비대면 거래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제주 농산물 통

합브랜드 홍보 및 겨울철 대표품목인 월동채소류·감귤 등 제주산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온라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원예산업종 합계회(2018~2022년)에 따라 통합브랜드를 통한 조직·규모화를 진행했다. 현재 통합마케팅조직 2개소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제주감귤농협)를 육성하고 있다.

도는 통합마케팅조직 2개소를 대상으로 2억 3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라이브커머스, 전자상거래 플랫폼, 흡소핑 등 통합브랜드를 활용한 비대면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한다. 고대리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4
27일 <17시 기준> 누적 3086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제주시 관덕로 44) 064-759-8556 www.jejuotong.kr

함께 만들어요! 내일의 제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개관

2021년 10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공간, 소통협력센터가 문을 엽니다.

개관행사: 2021. 10. 28(목) - 29(금)